

정책명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제출분야	먹거리 공급 및 유통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사업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급식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의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가치실현을 위해 시작되었음. • 시장에 의해서 주도되는 경쟁의 먹거리체계에 의존하는 조달방식은 급식의 공공성·안전성·안정성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한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주요역할을 수행하는 '도농상생 공공조달체계(공공급식센터)'를 만들어 기존 5~7단계에 이르던 공공급식 식재료 유통단계를 서울 자치구와 산지의 중소가족농을 직접 연결(1:1 매칭)하는 직거래 선순환 유통구조를 확립함. • 이를 통해,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고 농촌 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바꿈으로써 산지도 친환경생산지로 전환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구축. • 서울시는 2017년 5월 서울시의 강동구(인구 44만)와 전라북도 완주군 소농가(약 2,500농가)를 1:1로 연계, '도농상생 공공조달체계'를 통한 '친환경공공급식' 시범사업을 시작. • 2017년 11월 5개 자치구와 5개 산지로(자치구와 산지 1:1 매칭) 시범사업을 확대하였고 2018년 4개 이상의 자치구가 참여예정이며, 2020년까지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로의 확대를 목표로 진행.
접근단계	<p><사업 착수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자 의견수렴) 도농상생 공공조달을 통한 친환경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관계부서, 전문가 및 시민의견 의견수렴 • (조사·연구) 공공급식시설 실태 조사, 식재료 품질 관리 및 적정 급식단가 산정연구 • (계획수립)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조례제정) 공공급식 사업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 (지역과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장과 9개 도지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한국은 9개도,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로 구성) • (수발주시스템 개발) 웹 쇼핑몰 형태의 식재료 주문 및 행정업무를 위한 시스템 개발 • (시범사업) 상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제1호 개소, 하반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확대 <p><사업 시행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참여 자치구 및 산지 지자체 선정(서울시 품질조달기준에 적합한 산지 선정) • 자치구-산지 간 1:1매칭(MOU체결) 및 식재료 공급 관련 협의 • 자치구 및 산지 공공급식센터 준비(물류시설 및 운영인력 확보) • 이해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참여시설 모집 • 수발주시스템을 통한 식재료 주문 및 식재료 공급(공공급식센터) • 식생활교육 및 도농교류 산지체험 활동 추진

<p>심사기준 1 (혁신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자치구와 산지자치체의 1:1 매칭을 통해 서울의 공공급식시설과 산지를 직접 연결함. 자치구-산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기획생산을 통해 먹거리 폐기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공급체계 확립. 산지자치체에서는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중소가족농의 육성에 기여. • 농산물 대소비지인 서울에서 공공급식을 친환경식재료로 바꿈으로써 농촌이 친환경 생산지로 전환되도록 유도함. 현재 시범사업 중인 서울시 6개 자치구의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시설은 친환경식재료를 50% 이상 사용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70% 이상을 목표로함. • 서울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및 도농교류 산지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및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지에서는 친환경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생태적 영농지원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는 지속가능한 생산을 달성. 공급을 위한 생태적 농작방법 지원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생산이 가능해짐. • 친환경 공공급식은 소비도시 서울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직거래 공공조달체계를 통해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과의 환경적 문화적 괴리를 극복하고 도농상생 가치를 실현함.
<p>심사기준 2 (영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격차 해소에 기여함. • 서울시내 공공급식시설 462개소(19천명)가 참여중이며, 2020년까지 서울시 전체 공공급식시설 7,226개소(305천명)의 70%가 참여 예정. • 또한 공공급식 사업은 심각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한 농촌의 중소소작농을 지원하고자함. 안정적 유통판로를 확보해주고, 생산자 수취가를 보장함으로써 도농간 경제적 격차 해소에 기여함. 생산·유통·가공·전처리 등에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순환 경제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자들에게 이익이 환원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현재, 공공급식센터 월 매출액은 약 3억원 정도 수준이며 향후 참여자치구 및 참여시설 확대로 월 34억원 정도 공급예상(이중 농민수취비율은 80~90% 이상을 보장)
<p>심사기준 3 포괄성</p>	<p><thematic in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지속가능한 식생활, 취약층의 건강 증진, 교육복지, 도농상생 등의 다중 목표달성을 위해 평생교육국, 시민건강국, 복지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등 서울시 TF구성을 통한 다부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

- 이는 밀라노 도시먹거리협약 실행과제의 거버넌스 영역, 지속가능 식생활과 영양, 사회경제적 형평성, 먹거리 생산, 먹거리 공급·유통 부문을 포괄하는 사업임.

<territorial inclusion>

- 식재료 소비지인 서울과 식재료 생산 지자체의 연결을 토대로 추진되므로 본격적인 사업시행 이전에 9개 산지 광역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였음.
- 또한, 서울시 기초자치구 6개구와 6개 산지 지자체도 각각 MOU를 체결하여 공공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시로 도농협력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생산지 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

<기초지자체 도농상생 공공급식 MOU 체결현황>

서울시 자치구	강동	금천	성북	강북	노원	
산지 지자체	완주	나주	담양	부여	홍성	

※ 광역지자체 MOU체결 : 서울 ↔ 9개 광역지자체(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제주)

<social inclusion>

- 시민단체(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 지역먹거리운동플뿌리조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했음.
-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관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조직(서울시 공공급식위원회)이 정책심의 등 기능을 수행중이며, 각 자치구에도 자치구공공급식위원회를 추가 구성 준비중에 있음. 또한,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식재료 안전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소비단계에서 시민들이 직접 식재료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있음.
-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중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직, 협동조합 등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함.

심사기준 4
(역경지수)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극복>

- 시장경쟁 체제에서 도농상생 공공조달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식재료 납품업체, 대형마트 등 기존 시장 관계자 등의 반대에 부딪힘. 서울시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시행 이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6.03 ~ 2017.04)을 실시하였으며 약 150 회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주최함. 이를 통해 서울시의 시민 건강먹거리에 대한 신념, 사회경제적 취약층의 먹거리 격차 해소의 필요성, 농촌의 중요성과 상생의 필요성 등을 이해시킬 수 있었음.
- 또한, 이해관계자가 공공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이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수탁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존방법을 모색하였음.

<식품 안전성 확보문제 해결>

- 공공급식 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식재료 안전성이 보장되어야함. 공공급식에 대한 식재료 품질기준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친환경 인증 또는 산지 기초지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한 식재료를 공급함.
- 제철생산, 무제초제, Non GMO, 방사능 국가기준 준수, 생산유통가공 등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수·축산·가공식품 등 친환경식재료와 산지로컬푸드 인증 식재료 공급
- 또한, 3단계 안전성 검사체계를 갖추어 조달기준 준수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있음. 1차로 생산단계에서 산지는 공공급식 조달기준에 따라 출하 전, 생산자별·품목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와 결과를 공유함.
- 2차로 유통단계에서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는 시험성적서 및 검사필증 확인 후, 공공급식시설에 배송 전 부적합 빈도가 높고 소비가 많은 품목 위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함.
- 3차로 소비단계에서 공공급식시설의 학부모 및 이용자로 ‘식재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검수, 산지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공공급식시설 참여유도>

- 기존 거래방식에 익숙한 공공시설 관계자의 인식변화와 참여를 유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서울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공급식시설 관계자의 변화를 이끌어냄.
- 공공급식시설 관계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추진하고, 친환경먹거리의 필요성에 대한 식생활교육을 진행함. 또한, 도농교류 산지체험 활동을 통해 생산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생산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함.
- 아울러, 공공급식시설의 낮은 급식단가를 감안하여 공공급식센터를 통한 친환경식재료 구매에 대해 차액을 지원해주고 있음. 현재 서울시에서는 공공급식시설 월 급식비 지출액의 50~70% 이상을 공공급식센터에서 구매 할 경우 1식당 300~500원의 차액 지원중.(70% 이상 구매시 : 1식당 500원, 50%이상 구매시 : 1식당 300원)

<적정한 식재료가격 책정>

- 공공급식 사업의 식재료 가격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민수취가를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해야함. 두가지 상충되는 목표 충족을 위해 공공급식가격품질위원회에서 가격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간 공급가격” 체계로의 점차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적정한 식재료 가격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비, 배송비, 안전성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음. 유통비용 등 지원을 통한 직거래 가격이 책정됨으로써 생산자 소득과 소비자 급식 질 향상으로 이익이 환원됨.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연차별 예산계획>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단위:백만원)	5,025	14,974	47,587	45,537
참여자지구	6개구	10개구	25개구	25개구

<다부문협력 필요>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은 교육복지,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 도농상생 등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는 다중 목표달성을 위해 평생교육국을 주관부서로하여 시민건강국, 복지기획관, 여성가족정책실, 경제진흥본부 등 관련부서 TF구성을 통한 다부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추진 됨.